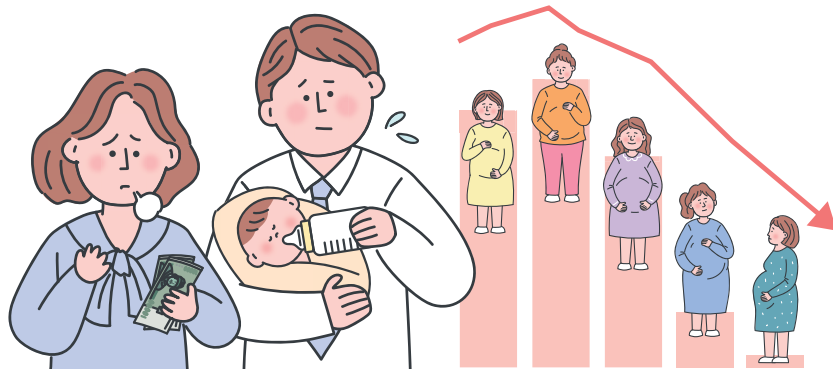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2023. 4. 18.(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 ·  육아정책연구소
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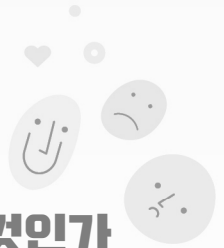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2023. 4. 18.(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 ·  육아정책연구소
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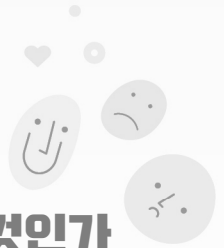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프 로 그 램

14:00 ~ 14:10	개 회 • 개회사 및 축사 • 참석자 소개
14:10 ~ 14:50	발 제 발제1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김 나 영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발제2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 박 태 순 팀장(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정책팀)
14:50 ~ 16:10	토 론 좌 장 이 윤 진 본부장(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 토 론 김 인 경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황 지 수 교수(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 지 훈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정 정 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16:10 ~ 16:20	종합토론
16:20 ~ 16:30	제 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목 차

개회사	김 선 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6
축사	김 기 현	국민의힘 당대표	8
	윤 재 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10
	박 대 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2
	김 영 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4
	우 동 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6
환영사	박 상 희	육아정책연구소장	18
발제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21
	김 나 영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		39
	박 태 순 팀장(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정책팀)		
좌장	이 윤 진 본부장(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		
토론	김 인 경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57
	황 지 수	교수(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61
	전 지 훈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65
	정 정 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73

개 회 사



김 선 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과 도심으로의 지역인구 유출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좋은 양육, 교육환경을 찾아 지방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도시 및 농어촌에서는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률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인구소멸지역은 115곳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25년 뒤면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향후 상당 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육 환경에 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과, “인구소멸 지역, 육아 인프라 취약지역 등 지역의 양육환경을 고려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 모색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지역의 육아정책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지역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해 보고자 본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최를 맡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지역의 육아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오늘 지역에서의 양육의 차이점 및 개선점과 또 지자체의 육아정책 실태를 분석하고
발제해 주실 발제자님과 고견을 더해주시길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저출생 위기, 인구
소멸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육아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선 교

축 사



김 기 현 국민의힘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육아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선교 의원님과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및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구유형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육형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인 육아정책이 정작 정책수요자인 양육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에 집중하던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육자들이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 육아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양육 환경을 재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발전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육아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의힘 당대표 김 기 현

축 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지역의 육아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선교 의원님과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역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구 과소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중·소도시 및 농촌의 초고령화 현상은 고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6곳(59.6%)은 한해 출생아가 1천명 미만으로 집계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출생률과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 사회 유지 기반을 흔들며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도 공평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변화하는 양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 육아 인프라 취약지역 등 지역의 양육환경을 고려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양육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육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축 사



박 대 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김선교 의원님과 육아정책연구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 즉, 지방분권화된 복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양육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자체마다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격차가 큼니다.

지역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이 펼쳐져야 육아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궁극적으로 수혜자들에게도 육아지원 정책의 체감도는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정책 수요자의 체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육아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장이 더 활발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이러한 정책마련의 발판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지역맞춤형 육아지원방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육아지원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며, 이는 서로 다른 각 지역에서 실효성 있는 지역 육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심각한 인구위기 경고를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의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당 정책위에서도 입법·예산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축 사



김 영 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내 육아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선교 의원님과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장기화, 고령화의 가속화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상황이 된 이후, 20년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수는 약 24만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1년(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해볼 때 출산율은 절반으로, 출생아수는 1/3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출생아수 감소는 순차적으로 학령인구, 병역자원, 생산인구, 총인구감소, 지역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적으로 최근 원아 수 부족으로 어린이집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변경한다는 언론보도는 이미 지역에서 아동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상당히 복잡적이지만, 결국 결혼과 출산,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 구조와 문화적·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진단하여,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책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3월 28일에 위원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정책 요소와 다양한 문화적·가치적 요소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은 인구변화와 출생률 감소 등 사회 환경의 다층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양육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별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년 전과 지금의 2030세대는 일, 가족, 자녀에 대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대라 해도 성별, 계층, 거주지역 등 다양한 집단 차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요구는 상이합니다.

다양한 요구를 듣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자문단’과 다양한 지역·연령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위원회에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 또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전문가들께서 이야기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 영 미**

축 사



우 동 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입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 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합계 출생율이 0.78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초저출생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육아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님과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은 과도한 수도권 쏠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의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의 인프라 부족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돌봄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교육·문화, 생활인프라 분야 주민 만족도는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아도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과 양육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책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방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맞는 지방 주도형 출산과 양육, 돌봄 정책과 교육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사례가 활발히 논의되어 ‘지역사회 육아지원 정책 개선과 혁신 방안’이 모색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럼 개최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과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역사회 양육과 육아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헌신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 동 기**

환영사



박 상 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입니다.

2023년도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모든 아동이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비단 선진국의 위상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모든 생명의 출생과 성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이 시기에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방인구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의 유출로, 우리 사회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각 지역단위의 양육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의 양육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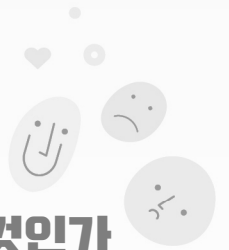
본 생태계 네트워크 포럼은 이러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관련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에 오늘의 포럼이 육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끝으로 본 포럼을 공동주최하여 주신 김선교 의원님, 후원해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께 감사드리며, 발제를 맡아 주신 광주여성가족재단의 박태순 박사와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박사님, 토론을 맡아 주신 김인경 박사님, 황지수 교수님, 전지훈 박사님, 정정희 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 좌장을 맡아 주신 원내 이윤진 박사님과 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4월 18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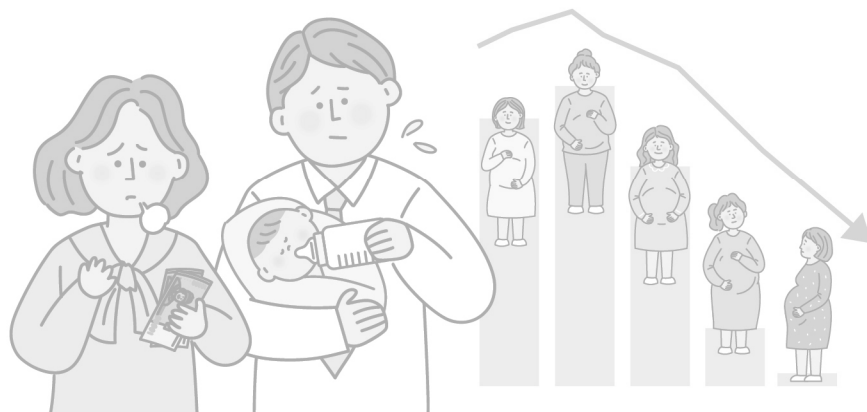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발 제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김 나 영 팀장
(육아정책연구 연구기획평가팀)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김 나 영 팀장(육아정책연구 연구기획평가팀)

1. 배경

지방인구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의 유출은 결국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역내 출산율이 저하되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자녀의 교육환경 및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지방의 소도시 및 농어촌은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¹⁾.

또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구성의 변화, 근로형태 변화 등으로 가구 내 자녀 돌봄 기능 변화와 보육지원체계 개편,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도입 등의 사회 정책적 변화에 따라 보육환경 역시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각 지역단위의 보육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의 보육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영유아 양육 환경은 대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과소화가 진행된 농어촌 마을은 도시 지역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농어촌 지역은 읍 소재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농업생산·산악·도서 지역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인구와 시설 밀도가 낮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육 시설과 주거 공간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통학 방법이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양육인프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²⁾.

본고의 일부 내용은 「2022 농촌영향평가: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김나영, 김지현, 조미라,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육아정책연구소, 2022)」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함.

- 1) 허문구, 이상호, 김윤수, 유이선, 조성민, 김진영, 조승국, 장인수, 박승규, 이용균, 한은주, 장재홍, 정성훈, 박경, 윤영모, 최예슬, 이명종(2022).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44-01. p.3.
- 2) 김태완(2022).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5.

실제로 농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 보다 정주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부문 중에서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 격차가 1.2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해당 부문은 건강·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돌봄, 취약계층 지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³⁾.

2. 중앙정부 농어촌 보육 지원 정책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보육수요가 있으나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는 만 0~5세의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이다. 운영비와 시설비는 모두 국비 50.0%, 지방비 50.0%로 지원되고, 설치비는 국고보조율 50.0%가 지원된다. 이 때, 16~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0%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운영비는 개소 당 최대 13,700천원을 지원하며, 그 중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로 각 월 100천원, 교재·교구비는 개소 당 500천원~1,000천원이 연 2회 지원되고, 프로그램개발비는 개소 당 연 2,100천원, 냉·난방비는 연 12,000천원이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시설비는 개소 당 최대 15,200천원을 지원하며,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하고,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0%까지 추가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2012년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고, 2013년도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2017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0년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2021년 현재 97개소로 확충되었다.

3) Ibid. p. 17.

〈표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9	2020	2021	계
인천	1							3		1	5
강원	1					1			4	3	9
경기										2	2
충북									1	11	12
충남	1		1	1	1		1		1	1	7
전북										8	8
전남	1	2	2	2	2	1		3	9	15	37
경북	1	2	4	1				1	2	2	13
경남	1							1	2		4
계	6	4	7	4	3	2	1	8	19	43	9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내부자료

이동식 놀이교실

보육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놀이차량이 방문하여 놀이감·도서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농어촌 보육지원 사업이다. 운영비는 개소 당 최대 15,200만원 지원되는데(국비 50.0%, 지방비 50.0%),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60.0% 이내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 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0%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동식 놀이교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2020년 7개소에서 2021년 10개소로 증가하였다.

〈표 2〉 2021년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현황

시도	시군
경기	의정부
경기	여주시
전북	익산시
전북	고창군
전남	여수시
전남	나주시
경북	경주시
계	10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내부자료.

농번기아이돌봄방

농번기 주말동안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방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등 법인·단체에서는 농번기아이돌봄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국비 100.0%로 시설 당 시설비 20백만 원 이내, 운영비 27백만 원 이내가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3월~11월 기간 중 4~6개월 동안 운영되며 만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 돌봄 대상이다. 농번기아이돌봄방은 2020년 23개소에서 2021년 76개소로 확충되었다.

〈표 3〉 2021년 시·도별 농번기아이돌봄방 지원 개소 수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	1	5	4	8	16	19	15	5	3	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내부자료.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2017년 653개소에서 2021년 현재 983개소로 확대되었다.

〈표 4〉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소 수	653	695	809	918	983

2023년 4월 12일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2017~2021).

3. 농어촌 영유아 인구 및 보육 현황

농어촌 0-5세 영유아 인구의 전체 영유아 인구에서의 비중은 2010년 8.2%에서 2015년 7.1%로, 2021년에는 6.9%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영유아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비해 농어촌 영유아 인구의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국 영유아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어촌 영유아 인구의 비율 또한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 농어촌 지역 영유아 인구

단위: 명, %

연도	합 계	전국대비 비율	영 아 (0~2세)				유 아 (3~5세)			
			소 계	0세	1세	2세	소 계	3세	4세	5세
2010	223,653	8.2	111,983	37,351	36,608	38,024	111,670	40,224	35,948	35,498
2011	226,894	8.2	112,569	37,139	38,765	36,665	114,325	38,046	40,218	36,061
2012	214,622	7.6	107,352	35,294	36,034	36,024	107,270	34,213	35,459	37,598
2013	206,356	7.5	103,003	31,481	36,110	35,412	103,353	35,247	33,423	34,683
2014	193,197	7.0	94,653	29,751	30,822	34,080	98,544	33,482	33,440	31,622
2015	193,658	7.1	91,914	29,788	31,048	31,078	101,744	34,230	33,733	33,781
2016	190,792	7.1	90,984	28,594	31,256	31,134	99,808	31,252	34,565	33,991
2017	183,436	7.1	86,362	25,769	29,539	31,054	97,074	31,224	31,271	34,579
2018	170,571	7.1	78,473	23,397	26,258	28,818	92,098	30,479	30,723	30,896
2019	159,276	7.0	71,276	22,365	23,593	25,318	88,000	28,205	29,651	30,144
2020	147,005	6.9	65,074	19,787	22,395	22,892	81,931	24,837	27,644	29,450
2021	133,140	6.9	58,673	17,312	19,684	21,677	74,467	22,514	24,461	27,492

주: 1) '농어촌'은 행정구역상 '군' 지역으로 한정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1년 현재 농어촌에는 총 6,73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국 어린이집 33,246개소의 20.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전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에서 53.2%, 전체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의 46.6%가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18.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국 및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현황(2021)

단위: 개소, %

구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비율)	33,246 100.0	5,437 16.4	1,285 3.9	640 1.9	10,603 31.9	13,891 41.8	142 0.4	1,248 3.8
농어촌 (비율)	6,738 100.0	983 14.6	683 10.1	298 4.4	2,513 37.3	1,990 29.5	25 0.4	246 3.7
전국대비 농어 촌 점유율	20.3	18.1	53.2	46.6	23.7	14.3	17.6	19.7

주: 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통계 재구성

어린이집 현원 현황을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현원의 50.1%가 농촌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41.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농어촌 현원 비율은 16.2%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정부 정책의 방향성인 국공립(공공보육시설 포함) 어린이집 40.0% 이용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국기준 국공립이용 비율이 16.6%이고 인건비 지원시설 이용 비율이 29.4%인 것과 비교하면, 농촌에서는 인건비 지원시설인 법인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7〉 전국 및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현황(2021)

단위: 명, %

구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184,716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00.0	22.7	6.1	2.6	45.2	17.6	0.3	5.5
농어촌	274,872	44,652	36,147	12,884	138,198	29,963	623	12,405
	100.0	16.2	13.2	4.7	50.3	10.9	0.2	4.5
전국대비 농어촌 점유율	23.2	16.6	50.1	41.6	25.8	14.3	18.0	19.1

주: 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통계 재구성

4. 도농 간 영유아 돌봄 현황 차이 분석⁴⁾

본 절에서는 영유아 기관 이용, 가정양육 현황,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농어촌 영유아 기관 이용의 특징

어린이집 이용 이유를 보면, 2018년의 경우 ‘전인적 발달’이 26.3-28.7%, ‘사회성 발달’이 25.8-32.3%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의 경우 ‘전인적 발달’이 40% 전후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인적 발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그 다음 순위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 13.0%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부모 대리보호’의 이유가 각각 26.1%, 17.4%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어린이집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대리 보호	사회성 발달	또래 친구 없음	양육 부담 경감	보육료 교육비 지원	교양 전액	기타	계(수)
전체(2021)	40.1	2.3	0.1	22.0	16.1	0.0	13.4	1.7	1.4	100.0	(1,464)
지역규모											
대도시	41.2	3.0	0.8	9.6	5.8	.6	13.0	1.9	0.2	100.0	(631)
중소도시	39.1	0.9	0.8	26.1	17.0	1.7	12.5	1.3	0.6	100.0	(578)
읍면지역	40.1	4.0	-	17.4	14.4	3.7	16.5	2.1	1.9	100.0	(255)
전체(2018)	27.6	1.5	1.0	23.1	27.4	2.7	14.1	2.6	0.2	100.0	(1,753)
지역규모											
대도시	28.7	0.7	0.7	26.1	26.8	1.7	12.8	2.3	0.2	100.0	(611)
중소도시	27.0	1.8	0.9	22.4	25.8	1.7	16.9	3.2	0.2	100.0	(514)
읍면지역	26.3	2.4	1.7	18.2	32.3	6.9	10.4	1.7	0.1	100.0	(628)

자료: 1)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p.248.

2)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p.273.

지역규모별 특별활동 이용과목의 비율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특별활동의 이용이 활발했던 2018년의 경우 읍면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언어(한글, 한자)의 이용빈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4) 본 절은 2018년,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및 김은설 외 (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표 9〉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한글, 한자 등)	영어	기타	계(수)
전체(2021)	44.6	44.3	16.8	20.3	37.4	7.1	1000(1,464)
지역규모							
대도시	43.7	43.0	18.5	21.3	36.6	6.7	100.0(631)
중소도시	45.9	46.1	15.0	19.4	37.9	6.3	100.0(578)
읍·면	43.1	42.7	17.4	20.2	38.3	9.8	100.0(255)
전체(2018)	61.5	60.4	18.2	27.6	45.1	9.6	100.0(1,231)
지역규모							
대도시	60.8	60.0	20.2	25.7	48.2	9.1	100.0(417)
중소도시	62.0	59.9	16.6	26.3	42.9	10.1	100.0(344)
읍면지역	61.7	62.7	17.8	34.6	43.4	9.7	100.0(470)

자료: 1)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p.226.

2)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p.338.

2) 농어촌 영유아 가정보육 현황

2018년 기준 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자녀양육은 어머니: 아버지의 분담 비율이 7.21: 2.79, 가사는 어머니: 아버지의 분담 비율이 7.45: 2.55로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0〉 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단위: 점(명)

구 분	자녀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2018)	7.21	1.43	2.79	1.43	7.45	1.67	2.55	1.67	(2,430)
지역규모									
대도시	7.17	1.49	2.83	1.49	7.43	1.66	2.57	1.66	(916)
중소도시	7.18	1.32	2.82	1.32	7.33	1.67	2.67	1.67	(757)
읍면지역	7.31	1.48	2.69	1.48	7.62	1.65	2.38	1.65	(757)
F	2.3*		2.3*		5.7***		5.7***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3) 한부모, 조손 가정을 제외함

4) 2021년 지역규모 별 데이터 없음

자료: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p.152.

* $p < .05$, *** $p < .001$

부모 외 양육지원에 있어서 지역규모의 차이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자녀의 친조 부모가 양육지원을 하는 경우가 14.1%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각각 6.8%, 7.9%)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외조부모가 양육지원을 하는 경우는 7.3%로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각각 18.0%, 13.7%)보다 낮게 나타나 농촌과 농촌외 지역의 차이를 보였다.

〈표 11〉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가사 지원 등)

단위: %(명)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 자매	엄마의 형제 자매	이웃, 엄마· 아빠친구	기타	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	없음	계(수)	$\chi^2(df)$
전체(2018)	9.2	13.6	0.3	1.1	0.4	0.2	0.6	74.6	100.0(2,533)	
지역규모										
대도시	6.8	18.0	0.1	1.5	0.5	0.4	1.2	71.4	100.0(946)	88.6
중소도시	7.9	13.7	0.2	0.5	0.3	-	0.3	77.1	100.0(782)	(14)***
읍면지역	14.1	7.3	0.5	1.0	0.2	0.2	0.2	76.5	100.0(805)	

자료: 1)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p.158.

2)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p.158.

3) 2021년 지역규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음.

* $p < .05$, *** $p < .001$.

2018년에 도농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을 설문하였는데, 농촌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된 항목은 면 지역 거주가구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소아전문의료시설 확충’, ‘**가정으로 파견하는 육아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 확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읍 지역 거주가구의 경우 역시 ‘놀이시설, 체험시설’, ‘소아전문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영유아 부모의 인식: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수)
전체	13.0	14.2	35.4	23.2	17.8	38.8	13.0	23.8	19.4	1.4	(500)
거주지역별											
동	14.0	13.7	37.6	22.5	18.1	37.4	13.2	25.0	17.3	1.1	(364)
읍	9.9	16.5	28.6	26.4	13.2	40.7	14.3	24.2	24.2	2.2	(91)
면	11.1	13.3	31.1	22.2	24.4	46.7	8.9	13.3	26.7	2.2	(45)

주: 1) 어린이집 확충, 2) 유치원 확충, 3)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4)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충, 5) **가정으로 파견하는 육아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 확충**, 6)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 7) 부모를 위한 공간(정보나눔터,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 확충, 8)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9) **소아전문 의료시설 확충**, 10) 기타

자료: 김은설 외(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

농촌 보육에서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농촌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원장 100명, 학부모 748명) 및 심층면담 결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한다.

영유아 부모

‘영유아를 위한 공공보육/교육서비스 제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이 1명이 있더라도 공공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56.7%, ‘지역 내 적정최소인원은 있는 경우에 공공보육·교육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43.3%로 나타났다.

‘향후 이주계획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39.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계획이 있는 집단에 대해 ‘이주를 계획한 이유’에 대해 추가로 질문한 결과, ‘**자녀 교육 및 보육문제**’가 43.3%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배우자 직장’이 36.2%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환경’의 경우 14.4%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심층면담 결과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⁵⁾,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하는 경우라도 대여 물품 수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인프라 부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언급되어 보다 적극적인 농어촌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읍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가야지만 애들을 데리고 먹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볼 수 있다든가, 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읍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읍으로 나갔을 때에는 애들이랑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부모A).

도시에 살았을 때는 자주 이용했었고 거기서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키즈 카페처럼 꾸며놓으셔가지고 저렴하기도 했고 놀거리도 많아서 자주 갔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대신에 최근에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소가 읍에 생겼더라고요. 장난감 대여만요. 읍내에 있는데, 그게 어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기만 들어가지고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주변에서 장난감 빌려서 서로 빌려서 쓰거나 그럴 정도지 그렇게 멀리까지는 나갈 생각은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부모B).

5)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0.1%였으며, 이들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23.6%. 이동식 놀이교실의 경우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5.3%였으며, 이들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30.2%. 농번기아이돌봄방의 경우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8.9%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24.1%.

어린이집 원장

정부지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원장 인건비 지원 3.22점/5점, 교사 인건비 지원 2.96/5점, 취약지역 교사 인건비 2.89/5점, 취약지역 조리원 지원 3.2/5점, 보육교사 교사수당 3.19/5점, 시간연장, 방과후 등 교사수당 3.03/5점, 원장담임겸직 교사수당 2.86/5점, **차량 운영비 지원** 2.63/5점, 사회복지법인 2.81/5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이기에 차량운영비의 지출 비중이 높아 운영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유난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의 교사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근무경력이 20년이상인 경우(2.4점),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3.57점)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경력에 따른 적절한 수당 지급이 필요해 보인다.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국공립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다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즉, 이미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충원률이 낮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부모님들의 근로시간 패턴이 도시지역과 다르므로 보다 유연한 보육시간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요구, 부모교육의 활성화, 인력수급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원해 주듯이 지자체마다 교사를 보유하고 있다가 급하게 필요할 때 선임교사제처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있다가 그 교사가 우리 원의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후에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교사 구하기가 힘드니까 들어오는 아이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원장A)

보육 담당공무원⁶⁾

영유아 보육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수상황들이 존재하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의 고충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6) 김나영, 김근진, 김희수(2018).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육아정책연구소. p.234.

〈표 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육 담당자) 면담 내용

연번	지역특성 및 지자체장의 중점 사항	보육예산 관련	고충	의견 및 건의사항
1	- 군 단위 지역으로, 14개 어린이집이 운영됨(민간 가정은 없음) - 저출산 타계와 보육 사업 강화	- 관내 어린이집연합회와의 협의내용을 지자체 군사 업무 반영함(차량 내 CCTV 설치 지원을 건의하여, 예산 편성함)	- 영유아인구 지속적 감소. 인구 수에 비해서, 어린이 집 개소수가 많은 편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국도매칭사업에서, 일부 국비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있음. - 지자체 회계(1월~12월)와 어린이집 보육회계(3월~다음해 2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행정 업무의 효율이 떨어짐	
2	- 면단위에 국공립어린이집 밀집되어 있어 국공립 충족률이 낮은 편	- 특수시책사업 2017년 23억 원 편성 → 2018년 30억 원으로 증액	- 보육예산의 가자수가 많고, 불필요하게 사업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음	- 지역특성, 영유아인구수,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국비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국비예산 편성을 요구함
3	- 저출산 극복, 인구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		-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노인복지 분야로 치우쳐 있는 경향 있음. 단가 책정에 불합리성을 제기함. ex)공기청정기지원사업(어린이집 50~70만 원, 노인복지시설 120만 원)	- 어린이집 원장 대상 보조금 신청 방법, 절차,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보조금 신청 시기에 원장문의 발생이 상당하여 업무 마비가 됨.
4		- 영유아 수는 줄고 있으나, 보육에 대한 지원요구는 커지기 때문에, 보육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음.	- 국비예산의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 책정으로 인한 어려움 있음	- 보육사업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음. 사업의 일원화, 포괄적 예산 편성을 요구함.
5	- 세종시 인접 도시로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많음 - 시설 면에서 우수한 세종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경우 있음 - 2~3년간 폐원하는 어린이집 급격히 늘고 있음. - 저출산 타계, 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인근시로의 인구유입을 막기 위한 유인 정책		- 영유아보육료, 교직원인건비 예산이 매년 부족함. - 사업내용이 같은 중복사업이 많음. 국고사업, 도비사업, 지자체사업 마다 명칭만 약간 다를 뿐, 중복된 사업이 대다수임.	

연번	지역특성 및 지자체장의 중점 사항	보육예산 관련	고충	의견 및 건의사항
	- 보육관련 공약은 어린이 집기능보강사업, 보육교사 처우개선임			
6		-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보육 관련 지원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보육사업과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매년 영유아보육료, 교직원인건비 부족분 발생. 보육료는 은행 예탁금으로 충당 가능하나, 인건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10월부터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임 - 보육사업의 가지 수가 많음. 예산 집행 담당자는 집행과 정산할 때 어려움이 있음	- 도비사업은 보통 30(도):70(시)의 매칭비율을 적용함. 시비 70% 비율은 지자체에 부담이 되므로, 50:50의 매칭비율을 요구함 -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자체 마다 지원금액과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발생함. 지역 간 불평등이 따를 수 있음. - 보육시간과 교사근무시간의 일치를 요구함. 휴게시간 확보가 어렵고,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또한 까다로움. - 보육료는 거의 동결인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상승하고 있음. 이를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함
7	- 일자리가 없어 인근시로의 인구유출이 있으며, 영유아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완전 무상보육		- 예산 하달 시기와 조기집행 실적으로 인한 고충을 제기함. ex)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일정에 맞게 방학중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기집행실적으로 인해, 학기 중에 집행하도록 하였음.	- 보육사업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음. 사업의 일원화, 포괄적 예산 편성을 요구함. - 보육사업의 가지수는 많지만, 대부분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체감도가 낮음.

6. 정책제언

중앙-지방 보육정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은 수요가 높으나 거의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운영여부,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의 지역적 차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국고 사업으로 확충할 사업예산에는 투자하되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 어린이집 초과공급, 도농간 아동수 격차에 따른 지역별 보육예산투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통해 보육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필요가 필요하다. 또한 보편적으로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절한 수요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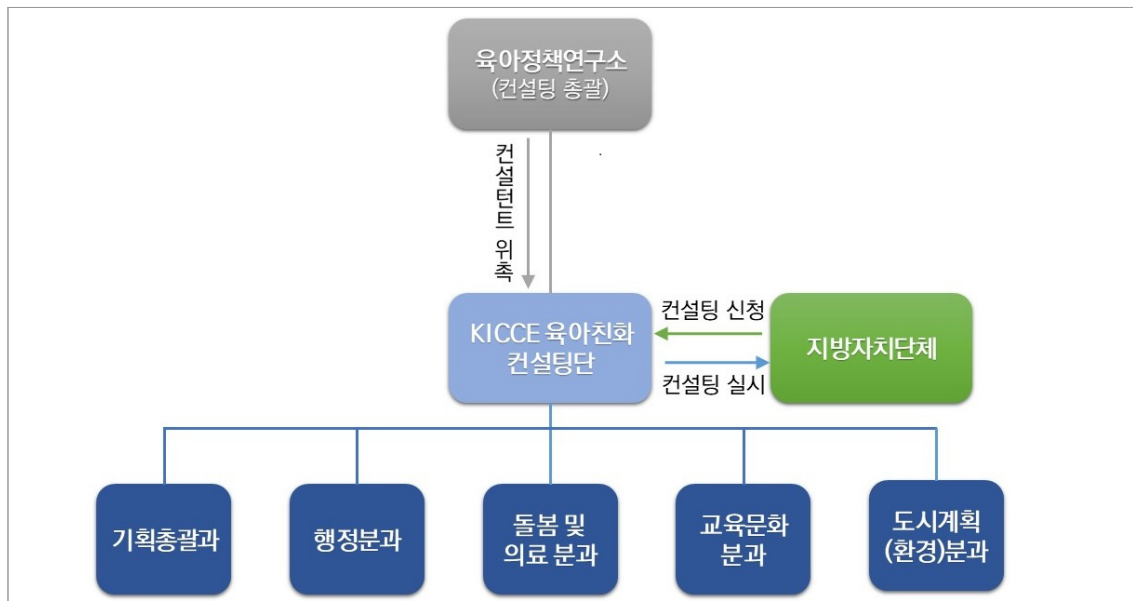
이러한 연계를 위하여 중앙-지방의 유기적 보육지원체계를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계획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단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별 현황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보육기관 분포, 영유아 인구규모, 지자체 담당인력, 보육서비스 인프라 등)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포괄적 보육지역분류의 개념을 정립한다.
- 수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분류**를 시행하고(예, 보육취약지역(현재), 잠재적 보육취약지역 등), 분류 지역그룹별 특성을 분석한다.
- **지역그룹별 맞춤형 사업의 큰 틀**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세부적인 시행사업(정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비중과 편성을 배분하여 보육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한다.

지역맞춤형 보육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보육의 질 제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 때 농어촌의 여러 특수한 여건(소규모 어린이집, 문화체험시설 부족 등)을 고려한 보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컨설팅 제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환의 조건으로 정기적인 보육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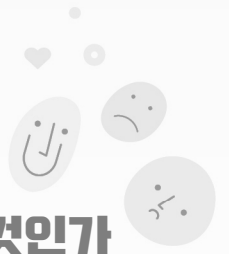
구체적인 컨설팅 운영 체계는 아래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컨설팅 총괄을 맡아 운영하며, 연구소 내 구축한 KICCE 육아친화 컨설팅단의 컨설턴트를 위촉한다. 해당 컨설팅단은 기획총괄과, 행정분과, 돌봄 및 의료분과, 교육문화분과, 도시계획(환경)분과 등으로 분과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그림 1〉 KICCE 육아친화 컨설팅 운영 방안



소규모 어린이집의 생태친화 보육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환경이 생태친화적인 것과 그것을 보육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전달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기관 특성별 다양한 생태친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인구유입 정책과의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농촌으로의 청년유입 사업 및 정책의 경우 단순히 일자리 사업이나 정착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입된 청년이 정착하여 이후의 삶을 그 지역에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결혼/출산/양육에서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 방안도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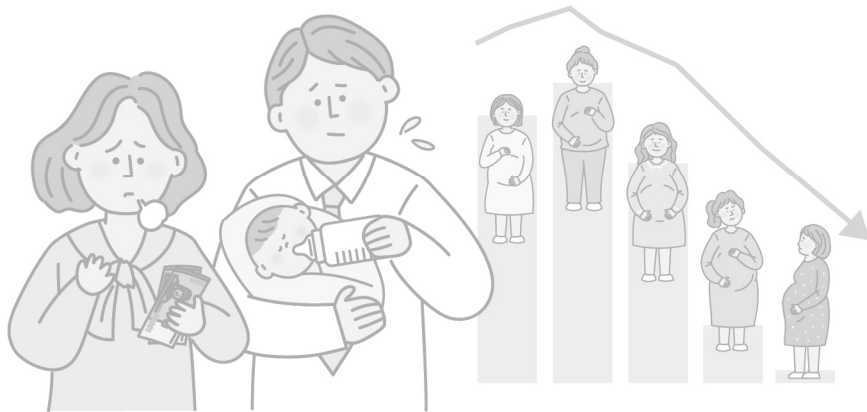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발 제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

박 태 순 팀장

(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정책팀)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

박 태 순 팀장(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정책팀)

■ 지역중심 출산·양육정책의 필요성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일방적정책으로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인구구조 변화나 정책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과도하게 출산율 향상에 몰입하다 보니 모든 정책의 출발이 임신·출산기에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
 - 따라서 그동안 추진했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비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함. 특히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특수성이나 여건에 맞는 지역 주도형 출산·양육 정책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 됨.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부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를 위해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정책을 설계하였으며 그 추진배경과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광주지역 청년인구 유출 등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맞벌이 증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시기가 아닌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함. 둘째, 정책 실효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되고 분절된 돌봄정책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돌봄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셋째, ‘아이낳아 키우기 맘 편한 광주’를 만들고자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체계 : 시 ‘아이키움지원센터’ 광주여성가족재단 ‘키움지원단’, 5개 자치구) 추진협의회(24명: 민·관·정·학계·현장전문가), 시 정책개발 TF 운영 등

1. 광주광역시 인구현황

가. 광주광역시 인구구조 변화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광주광역시 2020년도 출생아 수는 7,318명, 2021년도는 7,965명으로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8.8% 증가함.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2020년 대비 2021년 출생아 수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세종시 2곳으로 그 증가 폭도 광주광역시(646명, 8.8%)가 세종시(105명, 3.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9~2021년)

(기준: 매년말)(단위: 명, %)

구 분 (명, %)	2019년		2020년		2021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전 국	302,676	0.92	272,410	0.84	260,500	0.81
광 주	8,364	0.91	7,318	0.81	7,965	0.90

※ 합계출산율(15~49세) = $\Sigma(\text{해당연령} \text{ 낳은 출생아수} \div \text{해당연령} \text{ 여성인구})$

자료:: 市 출산보육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



〈그림 1〉 2020년~2021년 광주광역시 분기별 출생아 수 및 전국비교

□ 영유아 및 미성년 유자녀 가구 변화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7대 도시 중 광주(49,438가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번째 순위임. 미성년 자녀를 둔 유자녀 가구 수 역시 광주(153,718가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번째 순위임

〈표 2〉 광주광역시 0~6세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변화

(단위: 명, %)

연령		2011 년		2015 년		2020 년		2021 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총 인구		1,463,464	6.9%	1,472,199	6.6%	1,450,062	5.2%	1,441,611	4.9%
영유아	계	101,296	100%	97,599	100%	75,795	100%	71,441	100%
	남	52,420	51.7%	50,351	51.6%	38,784	51.2%	36,526	51.1%
	여	48,876	48.2%	47,248	48.4%	37,011	48.8%	34,915	48.9%

자료: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내부자료

□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 이동 현황

- 2011~2015년과 2016~2020년 각각의 기간에서 관측된 인구 이동의 특성이 다름. 2011~2015년에는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 간 이동보다는 타시도 간 이동 인구가 더 많았지만, 후자의 기간에는 반대의 특성이 나타남. → 최근 나타난 일부 자치구의 인구 재성장은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 간 인구 이동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도심 재개발, 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표 4〉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2015년			2020년		
행정구역별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 간 이동	타시도 간 이동	행정구역별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 간 이동	타시도 간 이동
광주광역시	46,438	104,773	광주광역시	162,278	125,240
동구	2,911	8,531	동구	19,375	10,359
서구	9,364	18,146	서구	34,850	25,547
남구	7,560	14,268	남구	28,693	18,330
북구	12,364	31,106	북구	40,550	36,027
광산구	14,239	32,722	광산구	38,810	34,977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정책, 지역에 길을 묻다』(20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광주광역시

□ 청년인구 전출·입 현황 * 광주 ↔ 타시·도, 내국인 20~30대

- 광주지역의 2019년부터 2021년 청년인구의 전입, 전출, 순이동 변화를 살펴보면,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해마다 5천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이탈이 30대의 이탈보다 두드러짐. 20대의 인구이탈은 광주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세대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보임. 해가 갈수록 광주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20~30대 출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광주지역 청년인구 이동현황

(단위: 명)

구 분 (명)		계	20대	30대
2019	전입	8,127	4,970	3,157
	전출	13,741	9,749	3,992
	순이동	△5,614	△4,779	△835
2020	전입	8,333	5,148	3,185
	전출	14,329	10,277	4,052
	순이동	△5,996	△5,129	△867
2021	전입	8,446	5,390	3,056
	전출	13,714	10,211	3,503
	순이동	△5,268	△4,821	△447

자료 : 2022년 1분기 광주 대표통계,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가임연령대(15~49세) 여성인구의 변화

- 광주지역 15~49세 가임가능 여성인구는 2021년 말 기준 343,109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58,956명(-14.7%) 감소하였음. 특히 10대~40대 초반의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40대 후반 여성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가임가능 여성인구 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후반 34.8%, 30대 초반 30.4%, 30대 후반 23.9%, 40대 초반 13.9% 순으로 인구감소가 확인됨. 반면에 40대 후반 여성은 2011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6〉 광주광역시 가임기 여성 인구 변동

(단위: 명)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1년	57,115	47,178	50,777	58,554	62,670	66,883	58,888
2021년	37,228	49,543	49,148	40,737	47,669	57,563	61,22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민선 7기 ‘아이키움 행복도시’ 사업요약

광주광역시민선 7기 중점 사업으로 결혼 감소, 초저출산 현상 지속, 청년인구 유출 등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맞벌이 증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고자 추진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수행함

가. 비전 및 전략

〈표 7〉 광주광역시 출산·양육 정책 추진 비전 및 전략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추진 방향	생애주기별 지원	틈새 보육 확충	돌봄 인프라 확충	돌봄 공공성 강화	
핵심 목표	청년 출발 지원	출산 행복 환경 조성	안심 돌봄 환경 조성	부모 양육 부담 경감	일 · 생활 균형
세부 과제 (26개)	① AI 활용 공공앱개발 '광주청년있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①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추진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① 가족돌봄거점 가족센터 건립
	② 청년 동아리지원 '응답하라2030'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②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② 실내놀이시설체험 '키움뜰' 설치·운영	② 임신부근로자 교용유지지원 (신규)
	③ 청년 가족사랑등장 (신규)	③ 출생축하금·육아 수당 (신규)	③ 광주아이키움 운영	③ 24시간긴급아이 돌봄센터 개소·운영	③ 임신부 근로자 친화 지정환경 조성 지원 (신규)
	④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신규)	④ 광주형산후 관리 공공서비스 (신규)	④ 손자녀 돌보미 사업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확대	④ 가족친화경영육아 휴직업무 대행수당지원
	⑤ 예비부모부부 교육과정운영		⑤ 여성가족 친화마을 돌봄 확대	⑤ 아동수당 보편지급	⑤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
	⑥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완화				⑥ 공공기관 가족친화 경영모델개발
키움 추진 기반 ▶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체계 구성·운영 ○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 정책개발 TF, 키움지원단 등					

나.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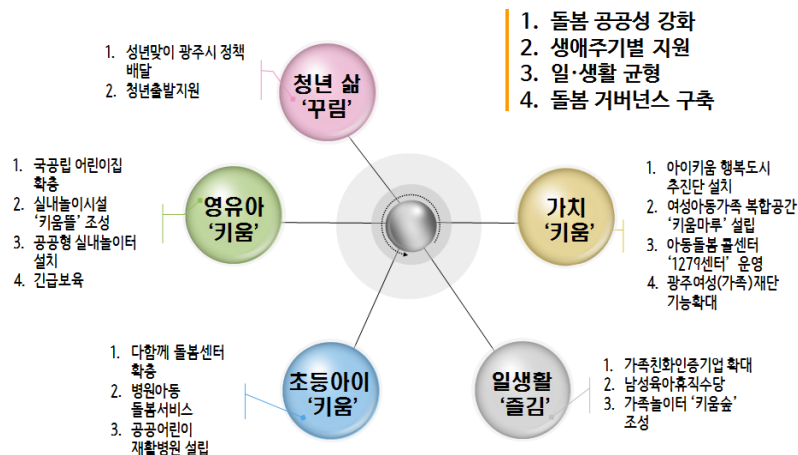
- 광주시의 생애주기별 정책추진에 대한 높은 의지
 - 단순 저출산 극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청년의 삶꾸림부터 생애주기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지자체의 높은 책임의식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이키움 좋은 환경 구축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 돌봄시설에 비해 공공 돌봄시설이 부족하여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부족에 대한 대한 모색
 - 지역사회 최우선 아젠다로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공성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환경 구축

다. 사업개요

- 생애주기에 근거한 빈틈없는 광주형 돌봄 시스템 구축
- 돌봄을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청년의 삶 꾸림, 아동 돌봄, 일·생활균형, 성평등 확산, 공동체 강화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업추진
-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투트랙으로 사업 추진

라. 기대효과

- 아동돌봄 관련 거점기관 설치·운영을 통한 아동돌봄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
- 생애주기적 관점을 도입한 아동돌봄정책 수행을 통한 아동돌봄 신모델 구축
-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돌봄부담 완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 돌봄의 공동체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공공형 일자리 창출



〈그림 2〉 광주광역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분야별 추진정책

마. 주요성과

□ 출산을 제고 및 시민 체감형 지원정책 추진

- 광주광역시 2021년 광주 출생아수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위

□ ‘광주아이키움’ 통합돌봄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 아동의 거주지별·연령별 돌봄정보를 한번에 해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임신·출생에서 일·생활균형까지 시민체감형 신규시책 시행 (임신 1, 출생 1, 돌봄 1, 일·생활균형 2)

①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광역최초

- 3개월 이상 거주 막달(임신 21주~출산예정일) 임신부 청소 등 가사지원 서비스

② 출산맘 나눔가게 확대 운영 *전국유일

- 임신·출산·양육가정, 육아용품 기부·나눔 및 커뮤니티 공간

③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초등포함

-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초 10만원, 중·고 25만원) 지원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전국최초

- 300인 미만 중소기업장 소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 지원

⑤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도입 장려금 *전국최초

-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300인 미만 고용보험 중소기업장 초등입학기(3~7월) 학부모 근로자 인건비 손실분(2개월 66만원) 지원

□ 성평등 육아 가치관 확산을 위한 아빠 육아 참여 활성화 노력

-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퀴즈 대회
- 아빠 육아 힐링캠프 : 양육태도 점검(토론), 목공 및 힐링숲 체험



육아체험 수기 공모전(11월)

플랫폼 만족도조사(11월)

아빠 육아 골든벨

아빠 육아 힐링캠프(12월)

□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향 제시로 정부혁신 주도

- 2022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우수상’ 수상 : ’22.3.16.
 - ▶ (미래개척 분야)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제시
- 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2.11.9.
 - ▶ (민원제도개선)임신·출생·돌봄 정보를 한번에!「광주아이키움」에서 만나요!
- 2022 지자체 저출산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22.11.11.
 - ▶ (일가정양립지원) 2022년 대통령상 수상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 임산부 근로자 친화환경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보상,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3. 민선 8기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 2.0’ 사업요약

가. 추진배경

-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확대
- 민선8기 시정목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구현 및 ‘광주다움 5대 돌봄’ 공약 과제 연계 아동·청소년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

구 분	중점 사항
목 표	▶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 - 출생부터 성장까지 아동의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키워드	▶ 광주아이키움, 돌봄체계, 틈새돌봄, 돌봄지도 - 돌봄 사각지대 없는 아동의 거주지별·연령별·유형별 돌봄지원
주요과제	▶ ‘우리동네 10분 이내 아동 돌봄’ 실현 - 마을단위 아동돌봄공동체 반영, 광주아이키움 돌봄지도 통합 제공

나. 사업개요

- 「광주아이키움2.0」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종합 추진
 - 3대 분야 6단계 30개 추진과제 7개 부서 협업, 신규과제 4개
 - (추진체계) 추진협의회(분과위) ↔ 광주아이키움(통합돌봄플랫폼) ↔ 키움지원단
-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로「우리동네 10분이내 돌봄」실현

- ‘마을단위 아동돌봄공동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과제 연계
- 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실태 반영한 광주아이키움 돌봄지도 2단계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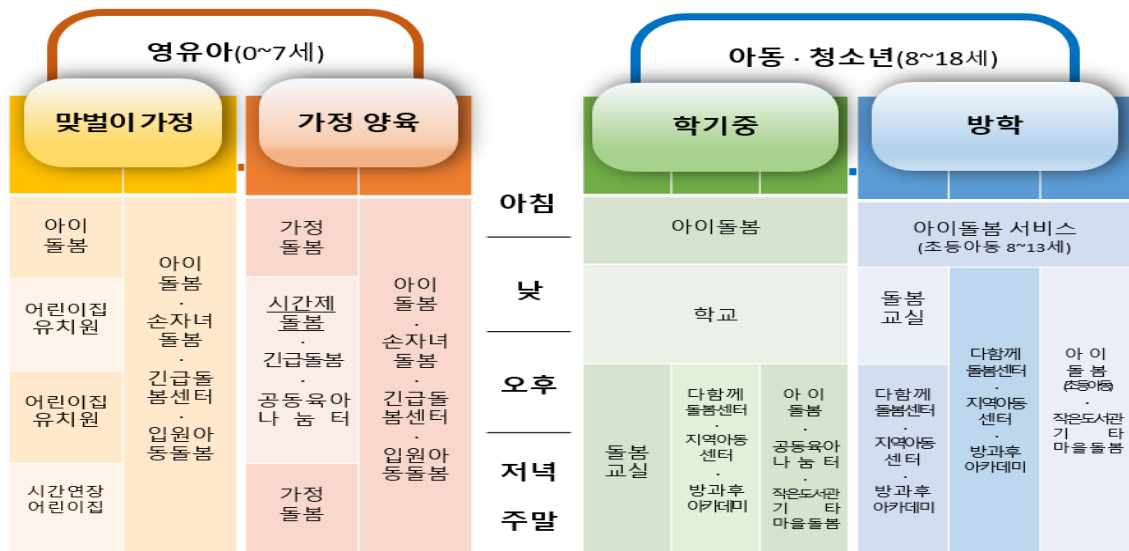
〈표 8〉 광주광역시 민선8기 출산·양육 정책

분야	단계	대상	추진과제	
가족 만남	결혼	신혼 부부	①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③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②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임신	임산부	④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⑥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⑧ 건강한 임신·출산 프로그램 운영('23)	⑤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⑦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출생	신생아	⑨ 광주형 출생·육아수당 지원 ⑪ 출산맘 나눔가게 운영	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⑫ 출산가정 상생카드 추가할인('23)
가치 돌봄	육아	영유아	⑬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⑮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상담 강화 ⑰ 실내놀이체험실‘키움돌’운영	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⑯ 아동수당 지급 확대 ⑱ 0~7세 무상보육 단계적 추진
	돌봄	아동· 청소년	⑲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운영 ⑳ 손자녀돌봄미 지원 확대 ㉑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㉓ 생활권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23)	㉒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㉕ 여성가족친화마을 돌봄 ㉖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맘편한 누림	일·생활 균형	가족	㉗ 모부성권 보장 권리구제지원 강화('23) 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㉘ 가족친화경영·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㉚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도입 장려금

다. 추진계획

□ 따뜻하고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

○ 마을 중심 육아·돌봄공동체 발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그림 3〉 성장단계별 온종일 돌봄체계

- 광주아이키움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확대(28개과제 →30개 과제)
 - 신규 추진과제 : 4개(임신 1, 출생 1, 돌봄 1, 일·생활균형 1)
- 건강한 임신·출산 프로그램 운영<건강정책과>
 - 초보부모 「임산부·육아 교육프로그램」, 고위험 임산부 관리
 - 임산부 요가교실, 모유수유 교육·상담, 출산전후 심리상담 등
- 출생가정 광주상생카드 추가할인
 - '23년 출생가정 광주상생카드 추가할인 지원(7% ▶10% 상시할인)
 - 출생신고시 동행복센터에 신청, 익월부터 할인지원(광주은행 협약)
- 생활권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아동청소년과>
 - 공공 유휴공간 활용 청소년 자율공간 10개소 연차별 확충('23~'26)
 - 북카페, 스터디룸, 동아리실, 노래방, 쉼터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 모·부성권 보장 권리구제지원 강화<일가정양립본부>
 - 육아휴직·노무 상담, 노동문제 간담회 등 권리구제단 운영
 - 모·부성 권리보장 권리침해 법률조력 및 심층상담 노무사 연계 등

4. 광주광역시 출산·양육정책 분석

2022년 7월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 설문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15명을 조사 대상으로 함. 조사항목은 조사응답자의 출산·양육 실태를 묻고 출산·양육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 인프라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의 돌봄관련 네트워킹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됨

가. 광주광역시 출산·양육정책 이용실태

- 인지도
 -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서 출생축하금·육아수당(75.2%)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66.1%),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62.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60.5%),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54.5%)순으로 나타남

〈표 9〉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인지도

(단위: %)

인지도	예	아니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48.7	51.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60.5	39.5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54.5	45.5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40.1	59.9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31.7	68.3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38.3	61.7
출생축하금·육아수당	75.2	24.8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62.1	37.9
출산맘 나눔가게	38.7	61.3
임원아동 돌봄서비스	42.9	57.1
손자녀돌보미 지원	37.3	62.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6.1	33.9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50.9	49.1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키움뜰	39.3	60.7
육아종합지원센터	50.5	49.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45.5	54.5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46.5	5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	36.9	63.1
가족친화경영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32.9	67.1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장려금	24.6	75.4

□ 필요도

-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필요 정도에 대해서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84.2%)와 출생축하금·육아수당(84.2%)이 가장 응답비중이 높았음

〈표 10〉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필요도

(단위: %)

인지도	예	아니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80.0	20.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82.4	17.6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80.2	19.8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79.8	20.2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73.7	26.3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79.8	20.2
출생축하금·육아수당	84.2	15.8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84.2	15.8
출산맘 나눔가게	77.4	22.6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83.4	16.6
손자녀돌보미 지원	79.0	21.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3.2	16.8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80.6	19.4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키움뜰	79.6	20.4
육아종합지원센터	79.4	20.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83.4	16.6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80.6	19.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77.6	22.4
가족친화경영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81.0	19.0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장려금	81.2	18.8

□ 이용경험 및 만족정도

-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출생축하금·육아수당 (55.1%)과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21.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18.8%), 행복플러스 건강지원(18.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12.0%),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10.6%)등 순으로 이용경험을 나타냄. 이용자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는 등입학기 10시출근제 장려금(77.3%)과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71.4%)가 높음

〈표 11〉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이용경험 및 만족정도

(단위: %)

구분	이용경험		이용만족도(이용자 대상)		
	이용안함	이용함	불만족	보통	만족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81.6	18.4	5.4	35.9	58.7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81.2	18.8	0.0	46.8	53.2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93.2	6.8	8.8	44.1	47.1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94.4	5.6	3.6	39.3	57.1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95.4	4.6	8.7	21.7	69.6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94.0	6.0	3.3	33.3	63.3
출생축하금·육아수당	44.9	55.1	5.4	34.1	60.5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79.0	21.0	8.6	37.1	54.3
출산맘 나눔가게	94.8	5.2	3.8	30.8	65.4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96.0	4.0	15.0	40.0	45.0
손자녀돌보미 지원	96.8	3.2	6.3	56.3	37.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8.0	12.0	6.7	33.3	60.0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94.4	5.6	0.0	28.6	71.4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키움뜰	91.8	8.2	0.0	34.1	65.9
육아종합지원센터	90.2	9.8	2.0	32.7	65.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91.8	8.2	0.0	43.9	56.1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89.4	10.6	3.8	32.1	6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94.4	5.6	3.6	46.4	50.0
가족친화경영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94.8	5.2	3.8	38.5	57.7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장려금	95.6	4.4	9.1	13.6	77.3

□ 출산·육아 관련 정보 획득경로

-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직장 동료나 친구를 통해(26.0%), 맘카페, 블로그, 마을육아모임 등(26.0%)을 통해 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나 가족·친척을 통해(23.1%), 자녀를 보내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안내문을 통해(16.4%), 시청, 구청, 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8.1%)순으로 확인됨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슨 혜택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에 대해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27.5%, 그렇다 43.3%)가 70.8%의 응답비중을 보였음
 맞벌이보다 외벌이에서,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 ‘자녀 출생 등록 원스톱 안내’ 이용의향 자녀 출생 등록 원스톱 안내 이용 의향에 대해서 이용할 의향이 없는(25.7%)응답자 보다 이용할 의향이 있는(74.3%) 응답자의 응답비중이 더 높음

나. 광주광역시 출산·양육정책 IPA 분석

□ 정책인지도와 정책필요도

- 높은 정책필요도에 비해 정책인지도가 낮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가족친화경영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장려금 등으로 나타남

〈표 12〉 정책인지도와 정책필요도 IPA분석(전체)

(단위: 점)

구분	인지도	필요도	IPA분석 결과
1)행복플러스 건강지원	1.49	1.80	우선개선(인지도 ↓, 필요도 ↑)
2)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1.60	1.82	유지강화(인지도 ↑, 필요도 ↑)
3)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1.54	1.80	유지강화(인지도 ↑, 필요도 ↑)
4)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1.40	1.80	점진개선(인지도 ↓, 필요도 ↓)
5)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1.32	1.74	점진개선(인지도 ↓, 필요도 ↓)
6)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1.38	1.80	점진개선(인지도 ↓, 필요도 ↓)
7)출생축하금·육아수당	1.75	1.84	유지강화(인지도 ↑, 필요도 ↑)
8)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1.62	1.84	유지강화(인지도 ↑, 필요도 ↑)
9)출산맘 나눔가게	1.39	1.77	점진개선(인지도 ↓, 필요도 ↓)
10)입원아동 돌봄서비스	1.43	1.83	우선개선(인지도 ↓, 필요도 ↑)
11)손자녀돌봄 지원	1.37	1.79	점진개선(인지도 ↓, 필요도 ↓)
12)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66	1.83	유지강화(인지도 ↑, 필요도 ↑)
13)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1.51	1.81	유지강화(인지도 ↑, 필요도 ↑)
14)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키움뜰	1.39	1.80	점진개선(인지도 ↓, 필요도 ↓)
15)육아종합지원센터	1.50	1.79	현상유지(인지도 ↓, 필요도 ↓)
16)다함께돌봄센터 운영	1.46	1.83	우선개선(인지도 ↓, 필요도 ↑)
17)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1.47	1.81	우선개선(인지도 ↓, 필요도 ↑)
18)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1.37	1.78	점진개선(인지도 ↓, 필요도 ↓)
19)가족친화경영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1.33	1.81	우선개선(인지도 ↓, 필요도 ↑)
20)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장려금	1.25	1.81	우선개선(인지도 ↓, 필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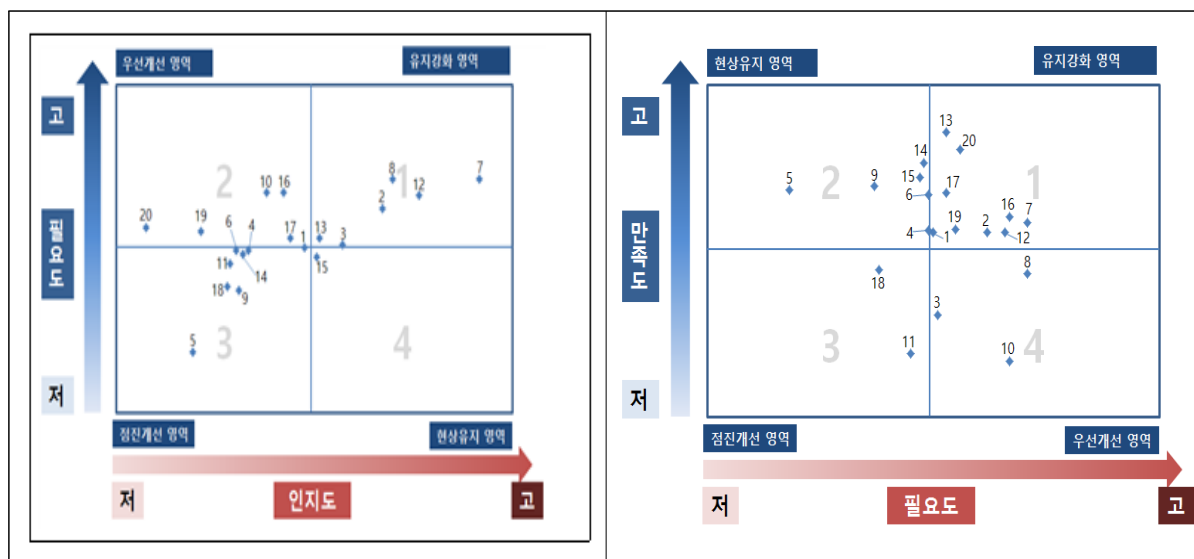
□ 정책필요도와 정책만족도

- 높은 정책필요도에 비해 정책만족도가 낮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사업은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등임

〈표 13〉 정책필요도와 정책만족도 IPA분석(전체)

(단위: 점)

구분	필요도	만족도	IPA분석 결과
1)행복플러스 건강지원	1.80	2.53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2)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1.82	2.53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3)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1.80	2.38	우선개선(필요도 ↑, 만족도 ↓)
4)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1.80	2.54	현상유지(필요도 ↓, 만족도 ↑)
5)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1.74	2.61	현상유지(필요도 ↓, 만족도 ↑)
6)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1.80	2.60	현상유지(필요도 ↓, 만족도 ↑)
7)출생축하금·육아수당	1.84	2.55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8)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1.84	2.46	우선개선(필요도 ↑, 만족도 ↓)
9)출산맘 나눔가게	1.77	2.62	현상유지(필요도 ↓, 만족도 ↑)
10)입원아동 돌봄서비스	1.83	2.30	우선개선(필요도 ↑, 만족도 ↓)
11)손자녀돌보미 지원	1.79	2.31	점진개선(필요도 ↓, 만족도 ↓)
12)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83	2.53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13)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1.81	2.71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14)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키움뜰	1.80	2.66	현상유지(필요도 ↓, 만족도 ↑)
15)육아종합지원센터	1.79	2.63	현상유지(필요도 ↓, 만족도 ↑)
16)다함께돌봄센터 운영	1.83	2.56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17)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1.81	2.60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18)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1.78	2.46	점진개선(필요도 ↓, 만족도 ↓)
19)가족친화경영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1.81	2.54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20)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장려금	1.81	2.68	유지강화(필요도 ↑, 만족도 ↑)



다. 광주광역시 출산·양육정책 개선방안

□ 만족도가 가장 높은 현금지원 확대

- 본 연구 및 육아정책연구소 결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에 대한 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며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정책성으로 나타남

□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정책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신청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고도화된 통합돌봄 플랫폼이 요구됨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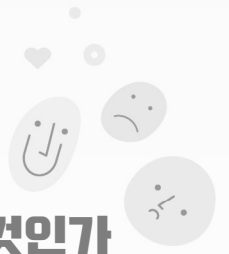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 가족친화경영 및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 지원, 임신부 직장맘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이 있음. 특히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도입 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 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낳고 싶은 가정에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 결혼연령의 증가로 만혼화가 이어지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최근 3년간 난임치료 환자수는 2019년 10,283명, 2020년 10,128명, 2021년 11,338명으로 한사람이 중복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마을아동돌봄공동체 지원강화 및 경력인정제 도입

- 마을공동체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마을돌봄활동가 돌봄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마을아동돌봄을 전문적 영역으로 격상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경력인정 프로그램, 경력인정서 발급, 취업 연계 및 활동수당제 도입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2023년~2024년 ‘광주광역시 온마을돌봄지원센터’ 구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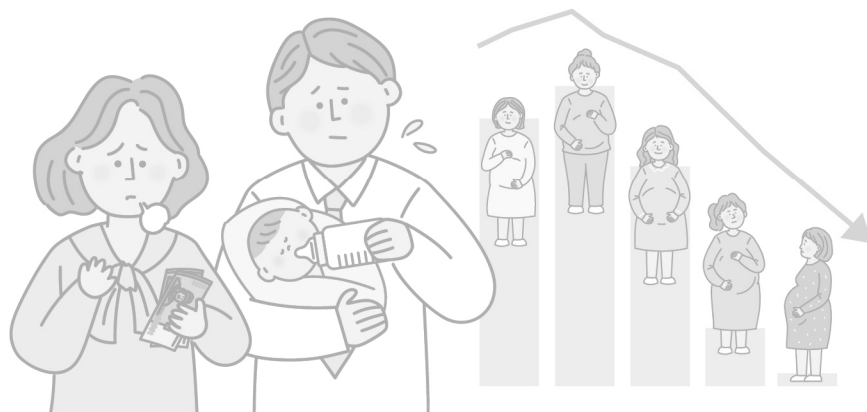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토론

김인경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토론문

김인경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우리 사회의 난제, 수도권 집중, 세대간 부모역할 인식 차, 가구유형별 교육자원 격차가 농어촌 지역에서 구체화된 양상을 보육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

유보통합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와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문제를 구분해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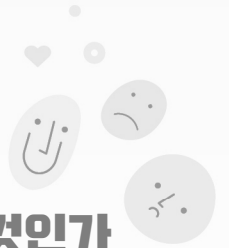
- 교육과정 대강화와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교사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반적인 변화인 가운데, 주변 환경과 아동 관심, 경험을 접목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제고할 재교육방안을 모색
- 농어촌은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보호자가 도시보다 많을 수 있어 교사가 이들과 면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 있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더 낮추는 방안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나 확충의 필요성을 영유아 이동의 편의성 및 안전성, 지역 영유아 인구 전망, 재정 투입 규모, 인접 어린이집 위치, 유보 통합 시 인근 유치원 이용 가능 정도 등과 기관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함께 고려해 점검할 수 있겠음.

-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원장 면담 시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원아 충원률이 낮다고 응답하였음.
- 유보통합 시 유치원의 0~2세 등록 가능 여부 고려
- 인구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나 영토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핀란드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음.
- 소규모 기관에서는 유아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래가 적을 수 있어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할 여지

소도시나 농어촌의 거점지역에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마련, 건강, 스포츠, 취미 프로그램에 더해 주양육자 역할관련 프로그램이나 상담 제공

- 육아인프라가 부족하면 청년 인구가 유출 → 지방세입이 감소 →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 → 사회간접자본 축적 감소 →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공공기관의 다기능 복합화를 추진하며 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로 인해 절감된 비용을 제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 함.
- 부모나 조부모가 의료, 공원, 문화시설, 쇼핑상권 옆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에 접근하기 쉽도록 교통망이나 이동 지원을 고려
- 본 연구에서는 친조부모가 육아를 함께 하는 비중이 유독 높고,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한글, 한자 등 언어 특별활동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아 세대 간 부모 역할에 대한 입장차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에 책, 놀잇감뿐만 아니라 양육고충에 대해 문의하면 조언해줄 수 있는 상담가를 둘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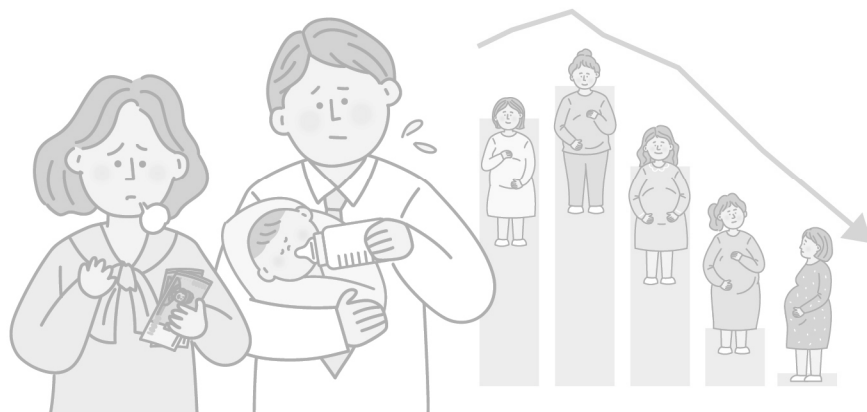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토론

황 지 수 교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토론문

황지수 교수(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황지수입니다. 인구/가족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 저출산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현상이지만, 오늘 포럼 주제 그리고 김나영 박사님 발제문에 맞춰 육아정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대도시는 더욱 붐비고, 지방은 더욱 사람이 없어지는 양극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소아과 등이 부족한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면 그나마 지역에 남아있던 시설들마저 문을 닫게 돼서 아이를 키우기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대도시학군 좋은 동네의 시설들은 대기가 길어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지역 간 보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도시의 보육환경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국 보육환경의 양적/질적인 측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세세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중앙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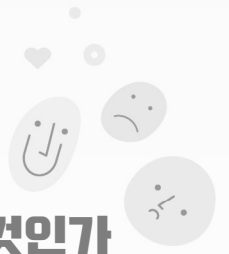
첫째, 아이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교육을 위해 필요합니다. 보통 소비자들과 달리 아이들은 본인이 받는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선택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낸 곳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이집에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좋은 케어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경제학자지만, 이 영역만

큰 정부의 개입, 공공부문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교육 및 훈련에서부터 커리큘럼 구성, 예산 사용, 시설안전점검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전국 공통의 스탠다드가 갖춰져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 투자를 해야 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육환경의 양적 질적 개선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보통 저출산 정책은 노동정책과 목표가 다르게 마련이고, 이에 상반되는 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확대나 아동수당 인상은 저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진작시키려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선행연구를 봐도 목표에 따라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육환경 개선은 일 가정 양립을 돕는 방향의 정책으로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시간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양육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과 가정 중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보육환경은 불평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공보육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도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최근 제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에 비해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 시간도 더 깁니다. 즉,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시간 투자 면에서도 가정 간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공공보육 및 공교육의 퀄리티가 높아야 합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좋은 케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세대 간 대물림도 덜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과학적인 정책효과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효과가 없었다면 왜 없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용역이 아닌 이상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된 데이터도 연구진에게 잘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익성이 강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의 협조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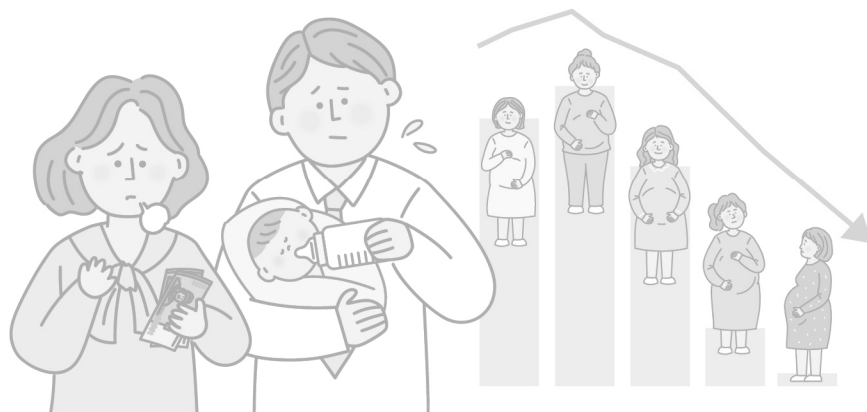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토론

전지훈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토론문

전지훈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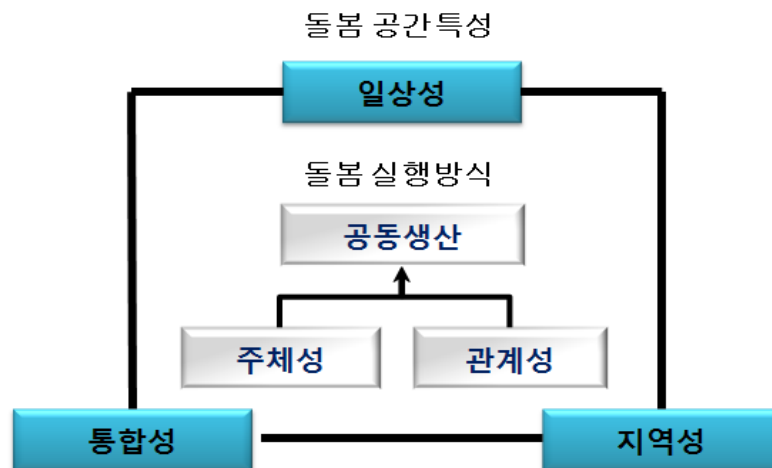
얼마 전 발표된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이는 내전 상황보다 더 낮은 출생률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 이탈리아가 1.24명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범접할 수 없는 최하위로 볼 수 있다. 이대로 가면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과 함께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민이 버는 돈의 42%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응답은 61%이며,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52%에 그치고 있다. 고령화도 심각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으나 육아에 대한 어려운 우리사회의 현실은 가장 많이 지적되는 지점이다.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육아전쟁에 돌입하고 미래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은 아이 낳기를 꺼려지는 주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말처럼,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먼 훗날의 어려움이 아니라 당장 우리사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데드라인이다. 발제자의 문제제기처럼 저출산 정책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주요 민간기관과 조직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실행을 고민하고 수행해야 할 문제이다. 지역마다 특성에 따른 정책실행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천안아산의 도시권과 함께 서해안의 어촌마을, 청양 및 부여군 등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특성에 따른 돌봄·육아활동의 양상과 수요의 차이점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공적인 활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입의 효율성의 한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돌봄서비스는 전체 사회와 공동체가 책임을 공유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돌리아 원칙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마을과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 따른 돌봄 활동이 중요한 지점으로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굳이 사회적 돌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돌봄이라는 노동 자체는 사람들간의 관계에 기인하며 돌봄노동은 가족과 개인 및 사회를 연결하는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노동이다. 특히 돌봄노동은 매우 일상적이며 정서적 도덕성을 포함하는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미시적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돌봄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주민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품앗이 육아와 같은 공동체 방식의 돌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은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원리는 다음처럼 마을 차원에서 돌봄이 발생하는 공간적 특성과 함께 실행방식의 변화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공동체 돌봄서비스의 특성



참고자료: 전지훈(2020)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은 특정 공간이나 주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일상생활에 기반하고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활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전달체계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 먹거리, 안전 등의 종합적이고 융합적 성격을 보인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돌봄 공간 안에서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분화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주체성을

갖고 긴밀한 협력과 관계를 통해 공동생산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정책의 역할은 이러한 돌봄의 공간적 특성에서 실행방식이 작동하기 위한 세부적 지원수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지역기반의 돌봄모델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광주형 돌봄시스템 도입과 운영의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장에서 농어촌과 도시의 특성에 따른 돌봄의 형태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현장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농어촌의 경우 돌봄 및 교육을 위한 주요 거점간 거리로 인해 이동접근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거점센터의 설치에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의 경제활동은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농한기와 농번기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돌봄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공급적 차원에서는 고령화되긴 했지만 지역 내 기존 공동체와 관계형성을 통해 효과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도시의 경우 익명성의 공간적 특징을 고려해 공동육아 필요성을 가진 주체간 친밀감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돌봄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감과 수요파악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역내 관계형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특성을 갖춘 유희공간 및 공공공간의 활용으로 공동체 돌봄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국내 많은 사례들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도시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돌봄, 교육 등의 전문조직 및 기관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효과적인 연계와 협력을 위한 공공, 비영리 조직 및 실행기관의 노력이 성패를 가늠하기도 한다. 광주시에서 우리동네 10분이내 아동돌봄 실현의 과제를 제시한 것처럼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마을단위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결국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활동 수행은 새로운 주체와 자원을 구축하려 하기보다 지역 특색의 돌봄수요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시키려는 정책의 전환과 역할이 중요하다.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등 돌봄활동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접근성 좋은 유희공간의 적극활용과 함께 다양한 지역 돌봄 주체 및 기관들의 참여,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의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위치한 병원 및 보건 전문기관, 다양한 전문성 가진 공공기관과 민간교육기관, 모빌리티 관련 기업, 종교시설 등 주체들은 소중한 연계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기관들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다양한 돌봄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별 거점 전담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돌봄정책은 출산과 육아시기의 지원정책에서 나아가 아이 뿐만 아니라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돌봄의 정책으로도 확대되어야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육아에서 보육으로 연계되는 아이돌봄의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가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을 비롯한 공동체기반의 돌봄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마을공동체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의 관심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와 학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혁신의 문제제기와 대안들이 결합하여 발생한 개념 및 무브먼트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방점을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형태와 방향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을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안적 교육활동이라는 의미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리는 학교 등 교육주체와 함께 마을 및 행정의 유기적 관계를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단위에서 대안적 교육활동의 활성화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의 대안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부모 및 보호자들도 아이들의 각자도생 돌봄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한 돌봄활동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사교육 비용부담에 대해 어느정도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돌봄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양육과 보육을 맡아야 하는 부모인 청년세대의 관점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비부모라 할 수 있는 응답자들은 자아실현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인식과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충청남도)

항목	15-19세	20대	30대
일(학업)이나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자아실현의 시간이 사라짐	43.4	35.9	26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	29.1	31.4	51.2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음	19.7	32.9	30.6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음	27	30.4	10.5

※중복응답, 주요응답만 발췌

충청남도, 2023. 「2022년 충남사회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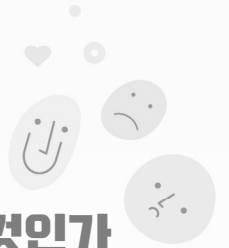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출산과 양육을 수행해야 할 부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이는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도움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주변의 마을과 공동체 차원에서 양육과 보육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적 역할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주체간 상호작용과 공생을 통한 학습환경을 통한 수요충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하는 육아와 보육의 울타리의 역할을 마을교육공동체가 제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협력하여 2010년 충남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만들기와 교육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였고 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정책은 법적 기반 마련 위해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현재 충남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도청, 도교육청, 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자의 사업을 구상한 후 시·군과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군별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비전으로 ‘학교와 마을의 연계’, ‘교육과 돌봄’, ‘행복과 꿈’의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출산과 보육의 어려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돌봄은 사회적 관계 기반의 활동이라는 개념적 전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마을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간의 연대, 협력, 상생의 관계와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적 방향을 육아 및 아이돌봄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어 정책지원의 세밀한 설계와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출산과 이를 위한 육아와 돌봄이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라면, 마을단위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향과 플랫폼과 같은 운영체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돌봄활동은 지역적 맥락과 현장의 특성이 녹아들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활동으로는 한계가 내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돌봄활동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적인 고민과 참여, 협력이 필요하며 관건은 이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상호성을 만들어주고 촘촘한 관계망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 공공정책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옛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 처방으로 구현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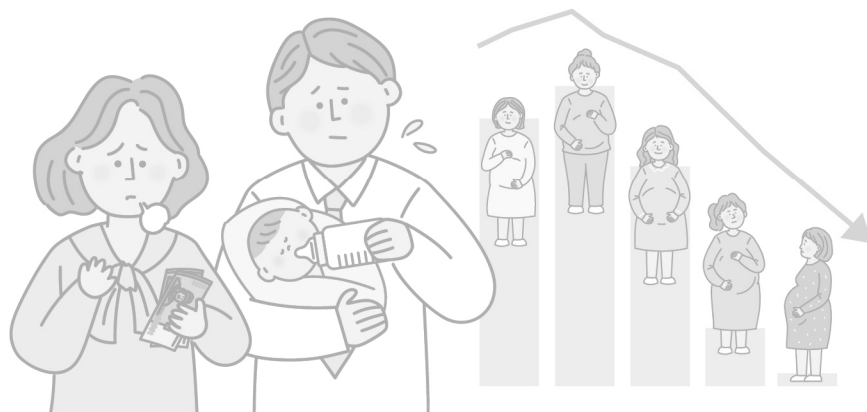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토론

정정희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



토론문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시의 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육아정책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오늘 포럼이 지역의 육아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나 정책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가운데 육아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포럼의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제 1~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출산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지원정책에 15년간 2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산율이 0.78 명으로 나타나 저출산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나 지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육아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와 디지털 전환시대의 특성들은 육아정책 수립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초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육아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초저출산 현상의 특이성을 분석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육아 생태계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아이돌봄서비스, 유보통합,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구축 등 다양한 육아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

여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줄수 있어야 하는 것',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정책 실태 분석을 해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중심 출산·양육정책의 필요성과 광주광역시 출산·양육정책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론하고자 합니다.

□ 지역중심 출산·양육정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은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나 정책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 주도형 출산·양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이나 수도권의 저출산 현상의 특성과 지방의 저출산 주요 원인 및 정책시행의 기반이 되는 환경은 매우 다름. 광주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가 아닌 전 생애에 걸친 생애 주기별 출산·양육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돌봄정책을 통합하여 원스톱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며, 지자체,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욕구를 정책에 직접반영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 광주광역시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이 설정되었으나, 중앙정부에서나 다른 지자체와 특별한 차별성이 부각 되지 않으며,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의 종류를 대부분 나열하고 있는 일반적인 출산 양육 정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봄.
- 단기적 차원의 접근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출산·양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육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광주 광역시의 다양한 출산 양육 정책 가운데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제들을 분류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체감도와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즉, 저출산의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봄.
- 광주 광역시 출산 양육 정책의 비전이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함께 키운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추상적으로 느끼지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한 비전을 제시해서 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집행의 범위와 대상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원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원들을 분류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원들과 간접적인 요소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많은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던 만큼, 저출산 관련 출산 양육 정책 집행 후 과학적 근거를 통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가진 평가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한 후 수정 보완하는 환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내에서도 시군별, 구별로 서로 중복되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정책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 통합성이 있는 종합적 지원정책이 되는 것이 필요함.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산양육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에서도 기존의 정책에서 차별화된, 광주광역시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저출산 대응정책과 육아정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시하여야 함.
 - '가족 친화적 세법 개정안',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이러한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출산 양육정책 수립과 과제이행을 위해서 부모와 영유아 관련 전문가, 청년세대 등, 실제적인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평가를 통해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시대적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출산양육 정책의 목적 및 개념, 방향성 재정립 필요
 - 그동안 실시된 저출산 정책 관련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육아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출산양육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국가(스웨덴) 등의 정책 사례들을

도입하여 광주시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스웨덴의 경우 1974년 세계 최초 아빠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고, 1995년 '아빠의 달' 육아휴직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4세이하 자녀를 가진 아빠의 77%가 한달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일본의 한 기업은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동료들에게 100만원씩 응원수당을 주어 옆자리 동료의 임신이 부담이 아닌 축하하는 일이 되도록 함.

-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므로,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부모급여 제도의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보장,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 아동 빈곤해소와 같은 장점들이 있으나 동시에 영아 공공보육서비스 약화나, 여성 고용 및 돌봄 불평등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정책과제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책과제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출산 양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부모, 교사, 지역사회, 기업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출산양육 정책에 관한 인식공유와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도록 해야 함

□ 저 출산 문제에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지원과 같은 물질적 측면의 지원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지원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현재 출산 양육 지원정책은 경제적, 인적, 시간적 지원 등 물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대부분임, 따라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엄마와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측면의 지원, 부모 건강의료비 지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육아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육교육서비스 질적 수준제고 및 돌봄 서비스 질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적절한 교사 대 아동 수, 환경개선, 교사의 질 향상 및 처우 개선, 질 높은 교육과정 제공, 안전한 실내외 환경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차별없는 교육·보육·돌봄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육아정책 중심으로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 ·  육아정책연구소
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